

스팸법안과 관련한 미국 내 논쟁

o 주요 내용

- 미국 내에서 스팸메일에 대한 대응방안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, 몇몇 주에서는 정크(junk) 이메일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쟁이 격렬한 로비전으로 비화되고 있음.
- 이러한 논쟁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, 다른 어느 주보다 강력하게 이메일 마케팅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이 임박한 상태에 있음.
-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인 Debra Bowen은 MS사가 대응법안의 제정을 통해 정크 이메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,
- 실제 그들의 의도는 스팸메일의 통로로 이용되는 자신과 같은 ISP업체들의 책임면책과 함께 마케팅업체들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그대로 향유하는 것이라고 하여 비난하고 있음.
- MS사의 대변인은 이러한 혐의를 거부하면서, 자신들이 지원하는 법안인 Murray법안이 모든 중요사항에서 Bowen법안과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음.
- Bowen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객으로부터의 요청이 없는 모든 상업적 이메일을 금지하는 것인데, 이러한 방식을 ‘opt-in’방식이라고 함.
- ISP업체들은 이러한 ‘opt-in’방식에 반대하고 있으며, ‘opt-out’방식에 의해 고객이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광고 메일의 발송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.
- 다만, MS사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Murray법안의 경우도 ‘opt-in’방식에 근거하고는 있으나, Bowen은 법안추진과정에서 MS사가 그 규정들을 약화시킬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음.
- 이러한 스팸 메일 규제를 위한 방식의 문제는 대응법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주에서 논의되고 있으며,
- 또한 몇몇 주에서는 스팸규제 기구의 설립을 놓고 논쟁이 진행 중에 있음.

며, MS 등은 해킹을 통한 고객정보의 유출위험을 들어 반대하고 있음.

o 분석

- 캘리포니아 주 등의 입법추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규제방식에 대한 논쟁을 통해, 대부분 ‘opt-out’방식을 채택한 다양한 법안들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연방 의회에서 이루어질 치열한 논쟁을 예상할 수 있음.
- 만약 주 또는 연방 법률에서 ‘opt-in’방식을 통해 스팸메일을 규제하게 될 경우 이메일 마케팅업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,
- 이에 따라 ISP업체들의 상당한 수익감소 또한 예상할 수 있을 것이어서, 당분간 이해당사자들간의 로비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.
-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방식은 국제적으로도 차이가 있으며, 독일·오스트리아·핀란드·호주 등은 ‘opt-in’방식을, 프랑스·일본·스페인 등은 ‘opt-out’방식을 택하고 있음.
- 우리나라의 경우 스팸메일을 규제하고 있는 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’ 등이 ‘opt-out’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, 스팸메일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있음.
- ‘opt-in’방식은 수신 거부에 대한 수신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불필요한 광고메일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, 전자상거래 위축과 함께 해외에서 들어오는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도 존재함.
- 따라서 규제방식에 관한 논의는 관련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참조 기사 : washingtonpost.com, “Internet Providers Battling to Shape Spam Legislation”, 2003. 7. 7.

CIPA 인터넷 음란사이트 접근차단의 필요성 인정

o 주요내용